

# 과연 트럼프는 국제적 ‘기후악당’이 될 수 있을까?

파리협정에 반기를 든 트럼프 정부의 파위와 그 한계

[글] 이창 연구위원 changyi@si.re.kr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예측하지 못한 트럼프 정부의 등장

2016년 11월 8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민자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토론회 등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행태 그리고 폴 라이언(Paul Ryan)을 비롯한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조차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선거 전날 CNN을 비롯한 미국 유수 언론들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당선 가능성을 90%로 예측하고 있지 않았던가. 이 놀라운 반전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기업인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힘써온 환경보호 운동가들과 세계 기후변화 정책 당국자들에게 특히 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선거 바로 전날인 11월 7일, 모로코(Morocco)의 마라케시(Marrakech)에서 파리협정 이후 첫 당사국총회(the 22nd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2)가 열렸기 때문이다. 회의 첫날은 긍정과 낙관의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거의 수명을 다했고, 이후 오랜 산고를 거쳐 195개국에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미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태였던 것이다. 협정안도 교토의정서에서 진일보한 편이었다.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당사국 모두 감축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감축량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목표를 상향 제시한다는 대비책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파리협정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아래 탄생했고,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정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기에 협정 당국자들은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총회 둘째 날 모든 게 뒤집어졌고, COP22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미국은 세계 각국이 협력하는

### 파리협정 주요 내용

- 195개 당사국 모두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C보다 낮게 제한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독려
-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시
-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최소 1,0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처 지원금 제공

**그림1** 파리협정이 체결된 COP21 당사국총회 단체사진



자료 <https://www.flickr.com/photos/presidenciamx/23430273715/>

**그림2** 2016년 11월 7일 개최된 COP22 당사국총회 단체사진



자료 Di Gobierno de Chile - Jefa de Estado participa en ceremonia de apertura del evento de Alto Nivel de la COP 22, CC BY 2.0

프로젝트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만 하더라도 당시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이 ‘지구 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여 힘이 빠지지 않았던가.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변화 정책의 대전환을 예상케 한다. 실제로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전개될까?

이번 호 포커스에서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면서, 트럼프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예측은 서울시 환경정

책 수립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전략 또한 국가정책이나 세계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 오바마 업적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어떤 분야든 트럼프는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은 게 별로 없다. 최근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취임 첫날 중동국가 이민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지만 곧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정치

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심사숙고하지 않고 단발성 정책으로 밀어붙인 인상이다. 기후변화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지구온난화가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협정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sup>1</sup> 그러나 얼마나 깊이 궁리한 발언인지, 선거를 준비하며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불분명하다.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sup>2</sup> 기후변화 정책은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하는 오바마의 수많은 정책 중 하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가장 장기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항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최근 3년간 화석연료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남극의 온도가 과거 평균보다 6°C가량 올랐고, 작년 9월 공기중 탄소함량은 400ppm(parts per million)을 넘어섰다. 탄소함량이 350ppm을 넘

으면 강한 태풍이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오른다면 지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과학자들이 진단한 상태에서, 파리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탄소배출을 목표치만큼 감량한다 해도 최소한 2.7°C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035년까지 국가 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화석연료에 관한 제한을 모두 풀고 미국의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상반된 전략을 내걸었다.<sup>3</sup>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몇십 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공약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그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스티판 무어(Stephen Moore)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풍부한 석유, 가스, 석탄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에너지 생산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석

그림3 웨스트버지니아 탄광지역



자료 <http://www.denverpost.com/2016/09/06/company-new-coal-operations-virginia-west-virginia-wyoming/>

그림4 트럼프 석탄발굴 지지 유세현장



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6500104>

1 Donald J. Trump, 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 competitive, Twitter, 2012.11.6

2 Bryan Walsh, Trump's presidency could mean the end of a livable climate, Time, 2016. 11. 28

3 김남영, 2016, 트럼프 충격이후, 누가 기후변화 선도국?, 레디앙 에너지정치칼럼, 2016.11.18

유 시추와 채굴을 허용하면 향후 30년간 2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5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여기에는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를 비롯하여 석탄이 주요 산업인 여러 주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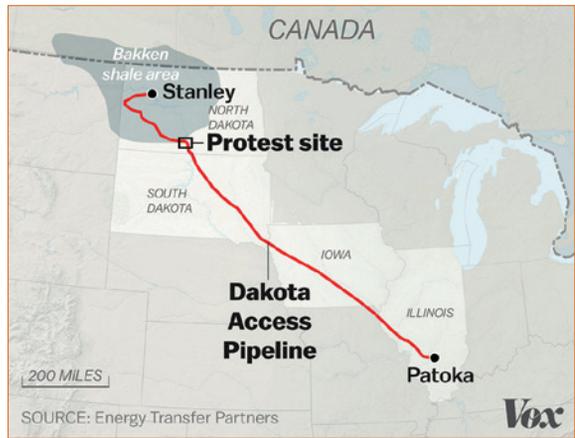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업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계획은 2005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로 줄인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미국의 각 주(states)가 화력발전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낭비한' 기후변화 예산을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오바마는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키스톤 XL 송유관,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거부해 왔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와 미국 네브래스카(Nebraska)주를 잇는 송유관 건설사업으로, 이 새로운 시설이 기존 송유관에 연결될 경우 하루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미국 텍사스 정유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2015년 이후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 4개 주를 지나는 다코타 송유관은 이미 1,931km 이상 건설되었다. 현재까지 미주리(Missouri)주의 저수지 335m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건설이 완료된 상태며, 사업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nergy Transfer Partners, ETP)는 그동안의 철도 운송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라 공언했다. 건설이 완료되면 다코타 송유관은 다코타의 셰일가스 유전에서 중부 지역까지 하루 57만 배럴의 오일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 송유관이 인

그림5 키스톤 XL과 다코타 송유관 루트



키스톤 XL 현황 및 계획



다코타 송유관 루트

자료 Vox, What Trump's executive orders on Dakota Access and Keystone XL actually do, 2017.1.24 (<http://www.vox.com>)

<sup>4</sup> Stephen Moore, The Trump Plan for Boom Times, Time, 2017. 1. 30

디언 보호구역의 문화유적 묘지(burial grounds)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마지막 저수지 구간 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ETP는 강 밑 바닥으로 터널을 뚫어 문화재 훼손과 식수원 오염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저수지 밑으로 터널을 뚫으려면 미 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이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오바마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 다코타 송유관 건설은 현재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상태다.

2017년 1월 24일, 트럼프는 새로운 송유관 프로젝트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하며 이에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의 골자는 오바마가 승인을 거부해 온 키스톤 XL 건설과 미 육군장관(Army Secretary)에게 다코타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명령이니만큼 중단되어 있던 송유관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되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sup>5</sup>

### 미국의 환경정책은 과거로 회귀하는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파리협정이 정한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질 게 분명해 보인다. 우선 미국이 파리협정에 가입한 법적 토대가 불안하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파리협정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형태로 가입하고 실행하는 쪽을 택했다. 이에 미국의 여러 주는 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미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한다면 결국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하게 되는 셈이다.<sup>6</sup>

트럼프의 '오바마 업적 지우기'는 그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인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EPA는 국가의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누가 이 기관을 이끄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는 환경보호청장으로 스콧 프루잇(Scott Pruitt)을 임명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환경보호청장으로 지명된 프루잇은 오클라호마(Oaklahoma)주의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오바마의 청정에너지계획이 부당하다며 EPA에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인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견해를 부정하여, 이미 EPA의 다른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10차례 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와 프루잇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이 꼭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따라서 EPA의 수장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EPA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석유·석탄 산업을 장려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여나갈 게 분명하다. 과거에 그가 석유·석탄 산업계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약 30억(27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7</sup>

###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 미래는?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

5 연합뉴스,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키스톤 XL·다코타 송유관' 허용한다, 2017. 1. 25; Time, A Tale of two pipelines, 2017. 2. 13

6 조선비즈, 파리협정 붕괴위기, 석유값 오를 수도, 2016. 11. 9

7 ABC New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Donald Trump's Pick to Head EPA, Scott Pruitt, 2016. 12. 8



### Scott Pruitt

Hea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age Skidmore/CC BY-SA, Flickr

“건설적인 토론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지구 온난화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토론주제이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Healthy debate is the lifeblood of American democracy, and global warming has inspired one of the major policy debates of our time. That debate is far from settled. Scientists continue to disagree about the degree and extent of global warming and its connection to the actions of mankind”

Scott Pruitt & Luther Strange, 2016, The Climate-Change Gang, The National Review, 2016.5.17. ([www.nationalreview.com](http://www.nationalreview.com))

“현재 지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궤도에 올라있는지 확실치 않고,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얼마나 심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태다.”

“We don't know the trajectory, if it is on an unsustainable course. Nor do we know the extent by which the burning of fossil fuels, man's contribution to that, is making this far worse than it is”

CNN, In interviews, Trump's EPA pick questioned climate change, said Obama EPA rules would be undone, 2016. 12. 13

“불필요한 EPA 규제로 몇 십억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The American people are tired of seeing billions of dollars drained from our economy due to unnecessary EPA regulations

NPR, Trump Picks Oklahoma Attorney General Scott Pruitt To Lead EPA, 2016.7.17

한다. 우선 EPA의 규제를 없애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기존의 규제를 제거하려면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수년간 밟아야 한다. 이마저도 민주당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sup>8</sup> 비슷한 이유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절차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트럼프가 기후 관련 정책을 뒤집기 어려운 더 중요한 요인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일 것이다. 에너지 시장은 이제 석탄과 석유로부터 풍력과 태양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 이후로 7년이 흐른 지금,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천연가스 발전 비율도 상당히 늘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짓는 것보다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게 덜

위험한 투자수단이 된 것이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COP22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sup>9</sup>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은 메가트렌드”,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됐어도 기후변화 대응은 특정 정치인이 이길 수 없는 큰 파도라는 것이 미국 환경법학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일지라도 세계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전망한 것이다.<sup>10</sup>

실제로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석탄 산업보다 5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 보수 유권자 연합회장인 진 카핀스키(Gene Karpinski)는 이렇게 말했다.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으로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놓였고,

8 Time, Can Trump 'scrap' Green Rules?, 2016. 12. 26

9 환경부 보도자료,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2016. 11. 19

10 조선비즈, 파리협정 붕괴위기, 석유값 오를 수도, 2016. 11. 9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의 흰소리가 파리협정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의 흰소리가 실행에 옮겨져서 무지의 대가를 치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sup>11</sup>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 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트럼프가 깨닫는다면 (또는 트럼프를 뽑아준 미국시민들이 깨닫는다면), 앞으로 그가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를 풍력·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쪽이 석탄·석유·가스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2.5~3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2015년만 해도 미국 태양광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는 석탄 산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sup>12</sup> 미국 전체적으로 보아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소배출량과 경제성장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9% 감소한 반면 GDP는 10%가 증가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sup>13</sup>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성장이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규제를 ‘극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이 재편되었고, 청정에너지 규제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고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43개 주는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트럼프 정부도 저탄소 에

너지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sup>14</sup>

## 도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할 일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백악관이 뭐라하든 도시와 대부분 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하려는 도시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콜로라도주의 아스펜(Aspen)시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모든 전력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도시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Oakland)시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듯 환경 분야만큼은 도시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성장까지도 견인하는, 미국 정책의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up>15</sup>

지금까지 기후변화 이슈는 국가 수준의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재난을 막는 일에 관한 한 보수나 진보의 정치적 입장 차이는 무의미하다. 도시의 리더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길이다. 뉴욕 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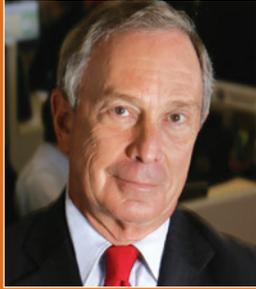
11 김규현, 2016, 기생비적인 파리협정을 폐기하려는 기후변화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2016. 5. 23

12 신현준, 2016, 신재생에너지 (Positive) 트럼프 취임 후 미국 태양광 시장 위축은 선부른 판단, 한화투자증권, 2016. 12. 27

13 Angie Fyfe, 2016, Trump said he would look into climate change, He needs to look no further than American cities, ICLEI USA, 2016. 12. 10

14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15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Michael Bloomberg

Rubenstein/ CC BY 2.0, Flickr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에 관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았다. 과거 10년 동안 미의회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세계 속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취는 도시와 기업, 시민들이 이루어낸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계획 중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에서 빠지겠다고 한다면, 나는 세계시장협의회 의장으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미국 128개 도시에게 참여할 것을 권하는 바다. 도시는 국가의 지원과 리더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국가의 아젠다를 따르지 말고 지역에서 참여하자. 도시야말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Fighting climate change has never been primarily dependent on Washington. Over the past decade, Congress has not passed a single bill that takes direct aim at climate change. Yet at the same time, the U.S. has led the world in reducing carbon-dioxide emissions. That progress has been driven by cities, businesses and citizens, and each group is determined to keep pushing ahead. In fact, if the new Administration withdraws from the Paris Agreement, as the chair of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I will recommend that the 128 U.S. mayors who are part of the group seek to join in its place. Cities would benefit from stronger leadership and support from Washington, but they aren't waiting on it. To find out where the country is heading, don't follow the national headlines. Get involved locally. That's where the action is.”

by Michael Bloomberg

Time, Where Washington fails to drive progress, cities will act, 2016. 12. 26

## 참고문헌

- 김규현, 2016, 기념비적인 파리협정을 폐기하려는 기후변화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2016. 5. 23
- 김남영, 2016, 트럼프 충격이후, 누가 기후변화 선도국?, 레디앙 에너지정치칼럼, 2016.11.18
- 신현준, 2016, 신재생에너지 (Positive) 트럼프 취임 후 미국 태양광 시장 위축은 선부른 판단, 한화투자증권, 2016. 12. 27
- 연합뉴스,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키스톤 XL · 다코다 송유관' 허용한다, 2017. 1. 25
- 조선비즈, 파리협정 붕괴위기, 석유값 오를 수도, 2016. 11. 9
- 환경부 보도자료,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2016. 11. 19
- Angie Fyfe, 2016, Trump said he would look into climate change, He needs to look no further than American cities, ICLEI USA, 2016. 12. 10
- Bryan Walsh, Trump's presidency could mean the end of a livable climate, Time, 2016. 11. 28
- Donald J. Trump, 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competitive, Twitter, 2012.11.6
- Michael Bloomberg, 2016, Where Washington fails to drive progress, cities will act, Time, 2016. 12. 26
- NPR, Trump Picks Oklahoma Attorney General Scott Pruitt To Lead EPA, 2016.7.17
- Stephen Moore, 2017, The Trump Plan for Boom Times, Time, 2017. 1. 30
- Time, A Tale of two pipelines, 2017. 2. 13
- Time, Can Trump 'scrap' Green Rules?, 2016. 12. 26
- Vivek Wadhwa and Mark Muro, 2016, Trump says energy regulations are hurting economic growth, The Washington Post, 2016. 12. 21
- Vox, What Trump's executive orders on Dakota Access and Keystone XL actually do, 2017.1.24. (<http://www.vox.com>)